

월간 기업경제

HRI Business Economics

02 1994 FEBRUARY

월간기업경제·등록번호:라 6125·등록일자:1993년 7월 8일/발행일자:
1994년 2월 1일·발행 및 편집인:배성동·발행처:현대경제사회연구원/
주소:150 01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 4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462호·대표전화:784 6544, FAX 784 6583·인쇄소:서울컴퓨터인쇄사

인상과 현실화, 완화와 철폐, 그리고 국민 정서 / 이기영

환경 보전 관련 국제적 논의 동향과 대응 방안 / 이선룡

농산물 시장 개방과 유통 구조의 개선 / 이재욱

물가 관리 방식, 이대로 좋은가 / 홍순직

우량주를 잡아라 / 박종곤

UR 타결의 산업별 영향과 대응 방안 / 포럼

1. 기계 산업

2. 석유화학 산업

신상품 정보 / 심재철

환율 단일화와 중국 시장 환경의 변화 / 임진국

일본의 CATV 시스템은 경쟁력이 있는가 / 원상희

기업 세계화의 새로운 방향 모색 / 이상용

하이테크 시대와 미래학적 발상 / 정영국

산업 구조 조정의 방향과 과제 / 김광두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下) / 조홍래·김난주

인상과 현실화, 완화와 철폐, 그리고 국민 정서

李基榮*

“누적된 인상요인을 계속 억누르고 있으면 가격 및 유통 구조만 왜곡돼 서민들의 피해가 커진다” 정재식 부총리 겸 기획원장관의 취임 일성이다. 한편, 정 부총리는 또 다른 기자회견에서 더 많은 규제완화와 자율 존중을 강조 하면서, “규제는 무슨 규제, 철폐지, 탈규제야, 탈규제...”라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했다. 명쾌하고 시원한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두말할 나위없이 좋음직한 소신을 피력한 것이었다.

‘국제화만이 살 길이다’, ‘국제경쟁력을 어떻게 해야 높일 수 있는가’라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국민적 관심사와 연결되어 탈규제의 바람은 각 부문으로 무섭게 번지고 있다. 세관 검사를 없앤다는 발표나 농지 소유에 관한 규제를 완화시킨다는 정책 변화도 그 중 일부이다. 또 정부는 최근 토지 이용 규제 및 절차 간소화를 비롯 공장설립 규제해소 등 41개의 과제를 선정, 과감한 규제 완화의 의지를 새롭게 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내에서 규제완화의 새로운 바람이 일고 있는 것에 늦었다고 느껴지면서도 껍이나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 또한 정 부총리의 인상 요인을 현실화시키고 각종 규

제를 철폐하겠다는 강한 정책적 소신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고 싶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규제를 하거나 억제한다고 해서 제대로 지켜진게 과연 얼마나 있었던가 자문해보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현실화 시키겠다는 의지는 높이 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 부총리의 말처럼 인상 요인을 억누르면 경제 질서가 왜곡되기 십상이며, 불필요한 각종 규제는 부정부패를 유발할 소지가 다분히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엉뚱한 국민들만 피해를 입거나 모르는 사이에 범범자가 되어버리는 해괴한 꼴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 왔다.

어린이들이 먹는 과자도 인상 요인을 억누르면 봉지만 커지고 알맹이는 맛이 없어지거나 줄어든다. 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1975년에 폴란드 정부는 소세지 가격을 12.5% 인하하였다. 그러나 막상 내용물을 조사해보니 14.7%의 인상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 결과가 서방학자들에 의해 밝혀졌다. 소세지에 사용하는 고기의 등급과 함량을 낮추고, 밀가루와 물의 비율은 높이고 하는 고도의 수법을 쓴 결과였다. 빛 좋은 개살구란게 바로 이런 것이다.

농사짓던 사람이 땅을 팔고 도시로 가고 싶

* 연구위원, 프랑스 그르노블 II대학, 경제학 박사, 러시아경제 전공.

어도 땅을 팔수 없고, 도시 사람은 시골에 별장을 짓고 쉬고 싶어도 땅을 살 수가 없다. 땅을 살 능력은 서울 사람이 갖고 있는데 능력도 없는 옆집에만 땅을 팔아야 하는 구조는 당연히 범법자만 만들어 낼 뿐이다. 집을 짓거나 고치고 싶어도 이래저래 하다보면 부지불식간에 범법자가 되고 만다. 이젠 없어진다고 하니 그지없이 다행이지만 김포 세관의 점검사도 어찌보면 범법자에 대한 수색이나 다름 아니다. 이처럼 우리의 현실은 불법, 탈법, 편법이 당연한 것처럼 횡행할 수밖에 없으며, 잘못된 것이라고 옥박지를수도 없는 묘한 꼴을 하고 있다. 왜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비현실적이거나 불가능한 것들로 가득차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애초부터 비현실적이거나 불가능한 것 중 우리를 움아매는 대표적인 또 다른 하나는 국민정서라는 알 수 없는 실체다. UR이 타결되면 농업이 타격을 받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국민정서에 반하기 때문에 논의조차 못하고, 아파트 분양가를 묶어놓고 좋은 집을 지으라 하고, 부실 공사를 하면 그것도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으로 처리된다. 반대로 일부 정치인들은 국민이 원치 않는데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국민정서라고 포장하여 밀어 부친다.

원칙과 합리, 일관성이 없는 애매한 국민정서는 현실화와 탈규제의 시대적 요청도 물거품처럼 만들고마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 정 부총리의 물가 현실화 발언이 떨어지기 무섭게 각종 공공요금과 개인 서비스 요금들이 줄줄이 인상되었다. 당연히 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비등하였다. 현실화가 국민정서에 반

하는 것이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정부는 “자율 존중이라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담합이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처하겠다”고 나섬으로써 시장 원리에 의거, 과감히 인상요인을 반영시키겠다는 부총리의 입장은 반전되었다.

탈규제를 하겠다 선언해 놓고 한편으로는 또 다른 규제를 만들어 얹어매고, 누가 그것을 트집잡을 양이면 국민정서로 방패막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현실화이고, 누구를 위한 탈규제인지, 또 누구를 위한 국민정서인지 종잡을 수 없다. 탈규제도 해야하고, 규제도 해야하고, 현실화도 해야하고 억제도 해야하고, 그런 와중에 국제화·세계화도 해야하고 국제 경쟁력도 높여야 한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나의 합리적 선택이라기 보다는 몽땅 일망타진해야만 한다는게 우리의 과제인 양 보여진다. 정말 할일 많고 바쁜 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

나는 여기서 정 부총리에게 제안하고 싶다. 지금 우리 정부의 역할은 국제화·세계화를 촉진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우선하여 해야할 일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가득찬 우리의 현실을 과감히 현실적인 것으로 바로 잡는 것이라는 점이다. 썩고 끓아 수술해야 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국민 정서로 포장을 해도 직무유기인 것이다. 하여튼 수도물 오염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물값도 현실화 해야지”라는 정 부총리의 소신에 흔들림이 없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